### 예결위 4일차, 非경제분야 결산심사

# "윤미향, 조총련 접촉" vs "이종섭,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국민의힘** 윤 의원, 친북단체 행사 참석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징계안 제출

**민주당** 이 장관, 혐의자 미특정 지시
군사법원·직무수행법 위반 지적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비경제분야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본에서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위법 사항을 따져 물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채 상병 사건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이첩 보류했는지 과정을 들여다 봤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윤미향 의원이 관동대지진 발생 100년을 맞아 조총련이 주최한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관용차 등을 지원받는 등 국민 혈세가 쓰였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무처 측은 의원 자비로 외국에 나갈 시, 의원외교로 폭넓게 인정해 외교부에 협조 공문을 보낸다고 해명한 후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몰랐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에서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여했다. 조총련은 친북 성향의 재일동포 단체로,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총련은 반국가단체로 분류되고 있다. 윤 의원이 참석한 추모식에서 한 조총련 인사가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표현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양금희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은 올해만 18회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윤 의원이 그런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조총련은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주일 대표부의 성격을 띄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선 신고를 해야 하지만 윤 의원 측은 신고한 바가 없다고 한다. 윤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 한 것 맞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위반했다. 사전 접촉 건에 대해 신고한 바 없다. 윤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색깔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장관이 채 상병 사건을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일련의 과정들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알려진 7월 31일 속 진상을 집중 질의했다.

진 의원은 이 장관이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후 이 장관이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사건 수사자료를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자료만 경찰에 주면 된다고 지시했다고 한 점을 들어 군사법원과 직무수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 장관의 지시가 있은 후) 7월 31일 오후 6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고 채 상병 익사사건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상급자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하고 언론 노출 시 BH(대통령실), VIP(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수사단장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다. 국방부 누구도 (혐의자에) 누구를 넣고 빼라 이야기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해병대 사령관이 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 도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장관과 통화 후 이렇게 됐다고 한다"며 "당시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나'라고 질책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으니 오후 6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보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일이 없는데 왜 BH와 VIP를 끼워넣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野 '오염수 저지' 국제공동회의 개최

## 美·中·日 전문가 참여… "방류 성급"

美, 日 농수산물 수입 최대 감축
세슘-137, 방사성 물질 양 안 줄어
방사성 원소 제거 못해… 암 발병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제공동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한국·미국·중국·일본의 전문가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논의하는 공동회의를 열고 국제사회 여론 결집을 위한 연대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 상임위원장, 위성곤 공동위원장 등 회의 참석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제공동회의에 참석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서 전세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 패널로 조셉 벅슨 워싱턴사회적책임의사회 핵무기철폐위원회 공동대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중국 측 패널로 장무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마쓰쿠보 하지메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사무국장이 일본 측 패널로 참여했다.

이 대표는 인삿말에서 "저는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대신해 명백하게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 민주당은 17일에 이어 31일에도 야4당, 시민사회, 종교계 등 국민 47만여 명의 목소리를 담아 2차 국민 진정을 UN 인권이사회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옹호해놓고, 정작 지난 6월까지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줄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며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홍콩은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국제사회가 힘과 뜻을 모을 때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켜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발제에 나서 "지난 3일 이재명 당 대표의 명의로 10월 초 예정된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하는 친서를 88개국 당사국 수반에게 전달했다"면서 "런던협약에서 방사능 물질에 대한 안건이 11번째로 상정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총회가 오염수 투기 대응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실효성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중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쓰쿠보 하지메 사무국장은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된 오염수보다 더 위험한 것은 지하수로 바다에 빠져나가는 오염수가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해수 농도 추이를 정기 조사하고 있는데, 세슘-137의 경우 방사성 물질 양이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며 "어디선가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다. 지하수가 고농도로 오염돼 있어서 이렇게 방사성 물질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셉 벅슨 공동대표는 알프스로 오염수를 처리한다고 해도 탄소14나 삼중수소는 제거하지 못한다며 방사성 원소의 장기적 체내 축적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12년 동안 저장했던 방사성 냉각수를 방출하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라며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연구가 한번도 없었다. 과거에도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출되는 일이 있었으나 해양 생명체와 인간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반감기가 긴 방사성 원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나, 탄소14나 삼중수소는 제거하지 못했다. 기술적 어려움과 비용 문제로 보인다"면서 "저준위 방사선에 노출되다 보면, 인구 집단에서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 이후 당시 재해에 노출된 젊은 층에서 갑상선 암 발병률이 증가했다. 젊은 층이 더 취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당 로고 변경 검토

당 이미지 쇄신 차원으로 해석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 로고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현재의 로고를 만든 지 3년 만으로, 총선 전 당 이미지 쇄신 차원으로 해석된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검토 중인 새 로고는 당명에서 따온 'ㄱㅎ'에 당 상징색인 빨간색과 파란색을 활용해 만들어졌다. 검토 중인 새 로고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백드롭(배경 현수막)에 기존 로고인 'ㄱㅁ'이 아닌 'ㄱㅎ'을 선보이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백드롭을 바꾼 이유에 대해 "'경제는 국민의힘'이라며 "앞으로 오로지 민생과 경제에 국민의힘의 역량을 정부와 함께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당 로고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김기현 "임금체불, 무관용 원칙 대응해달라"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간담회
현재 13만명·8000억 이상 체불 발생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 "상습적인 악덕 저질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민생 행보 강화'를 선언한 김 대표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을 열었다.

김 대표는 "작년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무려 24만명 정도 된다고 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경우 아주 고약하게 악덕 기업주들이 있어 임금을 '조금 떼먹어도 모르겠다', '숨어버리면 된다'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정말 엄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는 "임금체불 행위가 악덕기업으로까지 연결된다면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런 경우 실효적 대책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는 지난 5월 3일 상습체불근절대책을 마련했지만, 상반기 현재 13만명의 근로자, 8000억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했다"며 "노동자들이 좀 더 따뜻하게 추석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조기 정산 대책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정한 노동부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임금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신고 사건에 대해선 기관장이 직접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청산 지도하고 수사 상황을 점검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정익 기자